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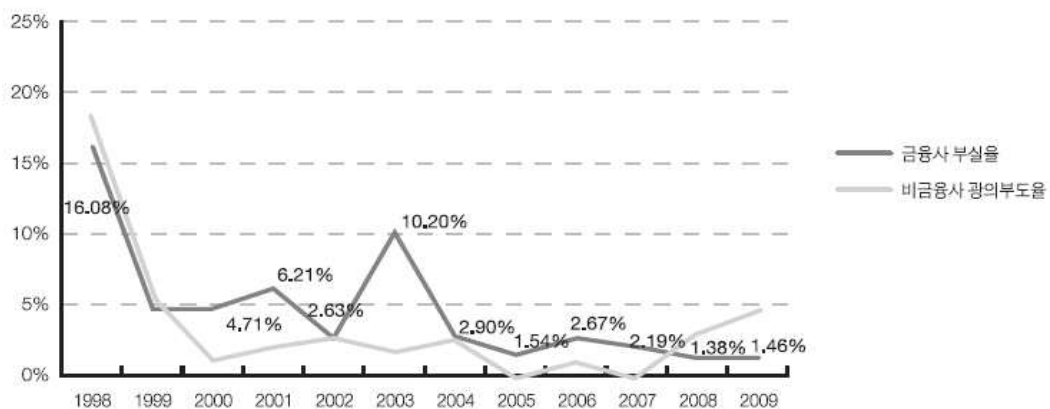
# 국내 금융산업, 동시다발적 부도위험 내재

김혜란 연구원

■ 한국신용평가에 의하면 국내 금융업종의 부도율은 비금융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폭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-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 1998년 3건의 부도 및 워크아웃 이후 최근 12년간 은행, 증권사, 보험사, 투신사 등 금융업의 연간 부도율은 0%를 기록하여 제조업(0~3.47%) 및 서비스업(0~3.64%)에 비해 낮은 수준임.
- 그러나 협의의 부도뿐 아니라 인가취소, 합병, 해산, 매각, 영업정지가 이루어진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간주할 경우(광의의 부도율인 연간 부실률) 금융업의 부실률이 비금융업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.
- 2003년 카드사태의 경우 금융업의 부실률이 10.20%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함.

〈그림 1〉 금융사 부실률과 비금융사 광의부도율 추이



■ 이는 금융업의 특성상 시스템위기 상황에서 업종 전반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용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, 정부 지원 범위 축소 및 저축은행 부실·가계부채 심화로 인한 동시다발적 부도위험 내재 가능성 등을 금융업의 부도위험 요소로 고려해야 함.

-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개선 노력, 금융감독당국의 관리·감독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·통제는 금융회사의 부도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해 왔음.
- 그러나 향후 정부의 지원 가능성 및 지원 강도의 불확실성,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이은 영업정지 및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향후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부도위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들에 대한 신용위험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.

(한국신용평가 보고서, 12/23)